

	<h1>보 도 자 료</h1> <p>제공일 : 2023년 3월 17일</p> <p>사 진 : 포함(1매)</p>	작성과	의회사무과
		담당부서	부서장 : 김차민 팀 장 : 이정묵 담당자 : 김시현
		연락처	061)830-6065

고흥군의회,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

-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각 철회 -
-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 -

- 고흥군의회(의장 이재학)는 17일 임시회에서 ‘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.
-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”며 “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, 특히 삼중수소(트리튬)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”고 설명했다.
- 그리고 “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”고 강하게 질타했다.
- 이에 덧붙여 “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- 이번 결의안에는 ▲일본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각 철회 및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▲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 및 어업인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특

별법 조속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.

- 한편,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원전 오염수가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톤에 도달함에 따라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결정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.

